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의안 번호	3336
----------	------

발의연월일 : 2026. 9. .

발의자 : 정병용 의원

1. 주 문 :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제안 이유

개인형 이동장치의 급격한 확산 속에서 관련 교통사고와 무단 방치 등 안전 위협이 심각해짐에도 이를 규율할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만큼,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고 건전한 미래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3. 이 송 처 : 대한민국 국회

4. 건 의 문 : 붙임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조속한 통과 촉구 건의안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PM)는 2019년 2만 5천 대 수준에서 현재 20만 대를 넘어서며 대중교통의 빈틈을 메우는 친환경 생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이용의 양적 성장과 비교하면 안전과 관리를 담보할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공백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신고제 형태로 운영되는 대여사업 구조로 인해 지자체와 경찰은 불법 주정차와 무단 방치, 무면허 운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율 권한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관련 교통사고는 2,200건을 넘어서고 사망사고까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시민의 보행 안전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피해의 절반 가까이가 청소년층에 집중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만 2만 7천 건을 돌파하는 지속적으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관리도 안 되는데, 사고 위험까지’라는 보도자료 제목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민원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동 수단에서 내리는 순간 운전자 역시 언제든 보행자이자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현실입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2025년 12월 18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규제 사건’ 관련 면허 의무화 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 법률에 흩어져 있는 규정을 하나로 묶는 통합 근거법 제정이
절실합니다.

이에 하남시의회는 33만 하남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고 미래형 이동
수단의 건전한 이용 문화를 확립하고자, 국회가 입법 책무를 다해 관련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하나, 「개인형 이동 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합니다.

2026년 9월 17일

하 남 시 의 회